

문 26.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한다.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동원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경우,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정형에 구류가 포함된다.
- ㄴ.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응소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.
- ㄷ. 무장소요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속한 진압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.
- ㄹ.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ㄴ
 ② ㄱ, ㄹ
 ③ ㄴ, ㄷ
 ④ ㄷ, 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27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 호선하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이 된다.
-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 회의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,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문 2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(O)과 옳지 않은 것(X)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ㄱ.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하며,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ㄴ.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(지방자치단체 포함)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- ㄷ.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ㄹ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ㅁ. 시·도지사는 10월 31일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12월 31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
	<u>ㄱ</u>	<u>ㄴ</u>	<u>ㄷ</u>	<u>ㄹ</u>	<u>ㅁ</u>
①	O	O	X	O	O
②	X	X	X	X	X
③	O	X	O	O	O
④	X	X	O	X	X

문 29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(가) ~ (라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(가) 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
대한 비축·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(나)의
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,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
하여야 한다.
- (다)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
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 협의회는
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(라)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	<u>(가)</u>	<u>(나)</u>	<u>(다)</u>	<u>(라)</u>
①	10월 31일	행정안전부장관	행정안전부장관	200명
②	5월 31일	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	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	50명
③	5월 31일	행정안전부장관	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	200명
④	10월 31일	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	행정안전부장관	100명

문 30. 다음 사례에서 ㉠ ~ ㉤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○○산업시설은 X시 Y동에 소재하고 있다. Y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○○산업시설이 마비되자, X시의 시장 甲은 질서의 유지를 위해 Y동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, 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급수 수단의 확보에 중사하고 있는 乙에게 Y동에서의 대피를 명하였다. ㉡ 甲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로 인한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Y동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. 한편, Y동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·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 중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되자, ㉢ 甲은 Y동의 명칭 및 위치, 관계인의 인적사항, C등급의 평가 사유를 X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. 이후 ㉣ 甲은 Y동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다.

- | | |
|--------|--------|
| ① ㉠, ㉢ | ② ㉠, ㉣ |
| ③ ㉡, ㉣ | ④ ㉢, ㉣ |

문 31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의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.
- ②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 선포된 재난사태를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문 32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조치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을 실시하였다.
- ㄴ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재난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필요하여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하였다.
- ㄷ. 재난이 발생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라 민방위대를 동원하였다.
- ㄹ. 시·도지사가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의 운항이 필요하게 되어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하였다.
- ㅁ.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하면서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대피를 명하였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, ㅁ
- ④ ㄷ, ㄹ, ㅁ

문 33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자연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심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② 산림청장은 산불로 인한 사회재난의 징후를 식별한 경우 심각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면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문 34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소방본부장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에서 퇴거조치를 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ㄴ. A도에 발생한 자연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인 경우,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기준은 A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ㄷ. B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국가의 시설과 관계되는 재난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에 따라 B군의 군수로부터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자가 응급조치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,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ㄹ. C군의 군수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원을 D군의 관할 구역에 있는 E군부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, 응원을 받은 C군의 군수가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ㄷ, ㄹ

문 35. A군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, A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자,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A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A군의 군수는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A군에 대하여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A군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A군이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A군의 군수는 A군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이 수립·시행 되기 전에는 재난관리기금·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없다.